Part 6
국제 농업 정보





국제 농업 정보 (2019. 12)

미국

- 기업/산업 보증대출이 농산업체 존속에 미치는 영향
- 농촌체험관광이 농촌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2018년 「농업법」의 농업보전정책
- 2019년 미국 농촌 동향

유럽

- EU, GI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체결
- EU, 농업용 폐수 재사용 촉진을 위한 규정 합의
-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에 대한 평가와 권고 사항
- EU 회원국별 생산자지원 수준 추정 결과
- 유럽연합 농업부문 고용 실태와 전망
- 유럽연합 중장기 농업 전망(2019-2030)

아시아

- 인도네시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확정
- 일본, 식량자급률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
- 일본, 식량자급률 및 식량자급력 향후 검토 방향
- 일본, 농업·농촌 소득 증대
- 일본, 농업진흥정책



미국

기업/산업 보증대출이 농산업체 존속에 미치는 영향*

❍ 소규모 농산업체의 경영성과는 시의적절한 자본조달에 달려있으며, USDA는 기업/산업 보증대출 프로그램(Business and Industry Guaranteed Loan Program)을 통해 소규모 농산업체에 유동성을 제공함.

- 기업/산업 보증대출 예산은 2017년에 8억 9,200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USDA가 운용하는 대출프로그램 중 가장 큰 규모임.
- 기업/산업 보증대출 프로그램의 주목적은 농산업체 사업 확장과 안정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농촌경제 활성화임.

❍ 농업경제연구소는 1990-2013년 농산업체 중 기업/산업 보증대출 여부에 따른 존속률을 추정하였음.

- 존속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업체 위치, 업종, 직원 수 등의 요인을 고려하였음.
- 기업/산업 보증대출 수혜 농산업체는 미수혜 산업체보다 약 12명을 더 고용했으며, 평균 6년 더 존속함.

❍ 기업/산업 보증대출 프로그램과 농산업체 존속률의 관계는 대출 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보임.

- 기업/산업 보증대출 수혜 농산업체는 미수혜 농산업체보다 2년 후 차기년도에 실패할 확률이 약 90% 적음. 이는 1,000개의 대출수혜 농산업체 중 약 0.3개만이 실패함을 의미함. 반면, 1,000개의 대출 미수혜 비교집단은 3개 기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음.

---

*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USDA ERS)가 발표한"Amber Waves: Rural Businesses That Receive USDA Business and Industry Guaranteed Loans Less Likely To Fail(2019.9.3.)"의 일부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 기업/산업 보증대출 수혜 농산업체는 미수혜 농산업체보다 4년 후 차기년도에 실패할 확률이 약 79% 적었으며, 6년 후에는 차기년도에 실패할 확률이 약 72%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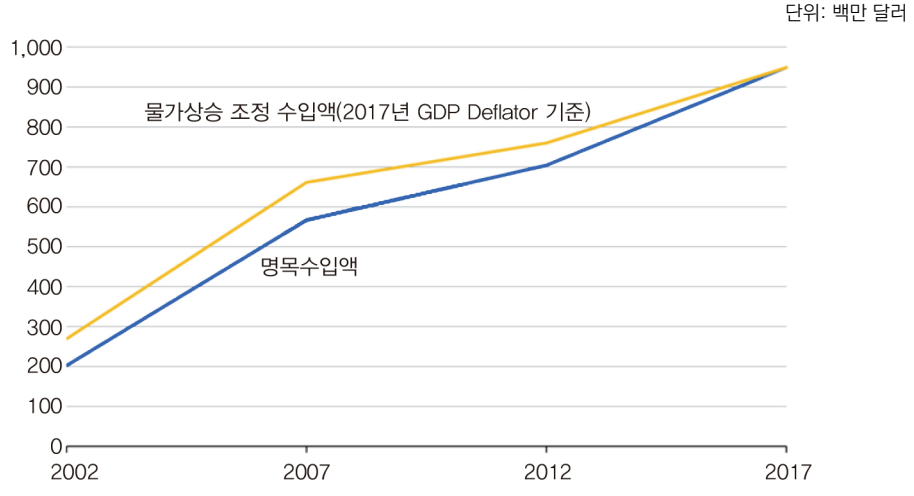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1.25.).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체험관광이 농촌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농촌체험관광은 농장견학 및 과수체험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농가소득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초기농, 중소농에게 중요한 부가수입원임.

- 농촌체험관광은 농가수입 증대 외에 농촌개발, 농촌에 대한 관심증대, 농촌유산 보존과 같은 부수적 장점이 있으며, 농촌 지역의 고용 창출에도 기여함.
- 2017년 농촌체험관광 수입액은 총농가수입액의 5.6% 정도지만 약 9억 5,000만 달러에 이르며, 2012년에 비해 약 2억 4,600만 달러가 증가하였음.

〈그림〉 2002~2017년 농촌체험관광 수입액 추이



자료: USDA, ERS.

*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USDA ERS)가 발표한"Amber Waves: Agritourism Allows Farms To Diversify and Has Potential Benefits for Rural Communities(2019.11.4.)"의 일부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 농업경제연구소는 농가의 농촌체험관광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음.

- 수려한 자연경관에 근접하고 야외활동에 적합한 곳에 위치한 농가는 농촌체험관광에 참여할 확률이 높으며, 이는 마케팅 확장가능성에 기인함.
- 여성 경영주 농가, 지역농산물 판로를 확보하고 있는 농가, 육우 및 말 사육 농가는 농촌체험관광에 참여할 확률이 높음.
- 기업가 정신[1]이 높은 농가경영주의 비율이 높은 지역의 농가는 농촌체험관광에 참여할 확률이 높음.
- 관광산업이 활성화된 지역과 와인 생산 지역과 같이 방문객 유치확률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농가는 참여확률이 높음.

❍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향후 연구과제로 농업경제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음.

- 농촌체험관광의 장애가 되는 요소, 성공요인 및 농가의 참여요인에 대해 개별농가를 추적 분석하고, 농촌체험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수효과와 지역 농산업체 집적이 농촌체험관광 참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야 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2.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년 농업법의 농업보전정책*



❍ 2018년 농업법에서 보존 관련 예산은 다소 증가함.

- 2018년 농업법의 농업보존정책은 2014년 「농업법」에서 시행되었던 대부분의 정책이 그대로 포함됨.
- 이전 농업법에서는 농업보존정책의 변경이 조금씩 있었지만, 2018년 농업법에는 기존의 주요 보존정책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정책예산만 조금 수정됨.

---

1) 특허율과 비농업부문 고용률로 대리(Proxy) 측정됨.

* 미국 USDA-Economic Research Service의 "2018 Farm Act Retains Conservation Programs But Could Reduce Payments for Land Retirement"(2019.12.2.)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 다섯 가지 주요 농업보존정책[2]은 대부분 환경보존예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적인 예산은 2014년 농업법 농업보존정책 예산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보존유보제도의 참여 인센티브가 감소함.

- 2018년 농업법에서는 보존관리제도를 2019년 회계연도에 7억 달러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는 최근 연도(2018년)에 비해 낮아졌지만 2023년까지 매년 1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증가시킨 반면, 환경질개선지원제도에 대한 예산은 예년에 비해 증가시킴.
- 즉, 2018년 농업법에서는 보존관리제도보다 환결질개선지원제도에 예산 편성 비중을 높임.
- 2018년 농업법은 보존유보제도 하에 생산자에게 지불해 줄 수 있는 한 해 평균 지불금이 감소함으로써 땅 소유자의 보존유보제도 참여 인센티브를 감소시킬 수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2.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년 미국 농촌 동향*



❍ **[1인당 소득]** 지하철 인프라가 없는 비도시지역(nonmetro)의 1인당 소득은 도시지역보다 낮고 상승세도 저조함.

- 2017년 도시지역의 1인당 소득은 5만 4,000달러로 비도시지역의 1인당 소득 4만 달러보다 많음.
-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1인당 소득 격차는 2010년 이후 더 커졌으며, 1인당 실질소득은 2010-17년 동안 13.5% 정도 격차가 커졌음.

❍ **[총 농가소득]** 비도시지역에 속하는 농촌 지역의 총 농가소득은 최근 계속 감소하고 있음.

---

2) ▲보존유보제도(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환경질개선지원제도(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 ▲보존관리제도(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 ▲농업보존지역권제도(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Program, ACEP), ▲권역보존제휴제도(Regional Conservation Easement Program, RCPP).

* 미국 USDA-Economic Research Service의 "Rural America at A Glance: 2019 Edition"(2019.11.)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 미국 총 농가소득은 2013년에 총 1,370억 달러로 가장 높았다가 2016년에는 총 660억 달러로 52% 정도로 감소, 2017년에는 총 810억 달러로 2013년 수준보다 낮으며, 이는 지속적인 농산물 가격 하락이 주원인임.

❍ **[인구수]** 비도시지역의 인구수는 2010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음.

- 2018년 7월 기준으로 비도시지역의 인구는 약 4,61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14.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7월 인구 대비 0.4% 정도 감소함.
- 비도시지역의 인구 유출은 2010-16년 동안 26만 명, 인구 유입은 2016-18년 동안 5만 4천 명으로 인구 유입보다 인구 유출이 두드러짐.

❍ **[취업률]** 비도시지역의 취업률은 도시지역 취업률보다 낮게 증가하고 있음.

- 2007-09년 금융위기로 인해 도시와 비도시지역의 취업률은 5% 정도 감소하였지만 2010-18년 도시지역의 취업률은 연 1.5%인 반면, 비도시지역의 취업률은 0.4%로 많이 낮음.
- 2019년 2분기 비도시지역의 취업률은 1%에 근접했고, 도시지역의 취업률은 9%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도시지역의 인구증가률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임.

❍ **[노동참가율]** 비도시지역의 노동참가율 감소는 취업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임.

비도시지역은 노동참가율이 낮고, 노동 수요 또한 낮아 비도시지역 취업률이 저조함.

❍ **[빈곤률]** 빈곤률은 2013년 이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지만 농촌 지역이나 고립된 비도시지역일수록 빈곤률은 도시지역보다 높음.

- 2010-17년 비도시지역의 빈곤율은 2011년과 2013년에 18.5%로 가장 높았으며, 2017년 16.4%로 가장 낮았음.
- 도시지역의 빈곤율은 2011년과 2012년에 15.5%에서 2017년 12.9%로 감소하였고, 비도시지역의 빈곤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2.16.).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

EU, GI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체결

EU, 지리적 표시(GIs) 보호가 가능한 다자간 국제협약 체결 예정

❍ 지난 11월26일, EU가 리스본 협정 제네바 법안의 회원국이 되기 위한 공식 문서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UN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 보관됨.

- 이는 EU가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ons, GIs)를 보호하는 다자협약 가입의 마지막 단계로 2020년 2월 26일에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EU농업개발집행위원(Phil Hogan)은 “EU는 국내외의 농민들과 식품생산자의 지적재산을 보호하며, 성공적인 지리적 표시 정책 개발을 위해 20년 이상의 노력을 투자했다”고 언급함. 또한 “제네바 법안 아래 국제적 수준의 식품 품질과 추적 가능성(traceability) 증진 약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EU 생산자, 소비자, 성장 및 일자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파트너들에게 분명한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덧붙여 언급함.

신속한 등록 절차

❍ 2015년 5월, 제네바 조약(The Geneva Act)은 1958년 원산지 명칭 보호와 국제등록을 위한 리스본 조약(1958 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을 현대화하여 모든 GI로 범위를 확대하고, EU와 같은 국제기구의 가입을 허용함.

- 이 조약은 EU가 다른 모든 회원국에서 자국의 GI에 대해 신속하고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산지 표시(Appellations of Origins, AO)에 대한 단일 등록 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음.

- 현재, 7개의 EU회원국인 불가리아(1975년 이후), 체코(1993년 이후), 프랑스(1966년 이후), 헝가리(1967년 이후), 이탈리아(1968년 이후), 포르투갈(1966년 이후), 슬로바키아(1993년 이후)를 포함하여 총 28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다른 회원국으로 알제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부르키나파소, 콩고, 코스타리카, 쿠바, 가봉, 조지아, 이란, 이스라엘, 멕시코, 몬테네그로, 니카라과, 북한, 페루, 몰도바,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북 마케도니아, 토고, 튀니지가 있음.
- EU 가입 후에도 개별 회원국은 여전히 제네바 법의 독립 당국이 될 수 있음.

❍ 위원회는 EU GI의 국제 등록 신청서를 제네바 조약을 관리하는 WIPO 국제 사무국에 제출하고, EU내 제3국의 GI보호 조건들을 충족하는지 평가할 책임이 있음.

❑ GIs란?

❍ GI는 자연적, 전통적, 문화적 요인을 포함하여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해당 지역과 연계된 품질이나 특성으로 지정함.
- EU에서는 식품 명칭을 지리적 표시 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나 원산지 명칭 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로 등록할 수 있음.
- 해당 제도는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 생산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의 모방 및 오용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함.
-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3국의 GI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협상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EU 영토 내에서만 적용됨.

❍ EU의 전통특산물인정(Traditional Speciality Guaranteed, TSG) 라벨도 있음.
- 이는 생산 방식과 그 구성과 같은 제품의 전통적 측면을 강조하지만 특정 지역에 대한 특성 연계성은 없음.
- 3,000여 개의 EU와 비EU국가들의 와인과 주류 및 식료품 명칭이 현재 EU에 등록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샴페인, 꽁테 치즈(Comté), 그라나 파다노, 고르곤졸라, 우조(Ouzo)등이 있음.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22328/EU-joins-international-agreement-to-protect-GIs (2019.11.27.)

EU, 농업용 폐수 재사용 촉진을 위한 규정 합의



❍ 지난 12월 2일, 유럽의회와 EU집행위원회는 농업용 폐수 재사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EU규정에 대해 비공식적인 합의를 도출함.

❍ 새로운 규정은 처리된 도시 폐수(treated urban wastewater)를 관개농업에서 사용하기 위한 최소 요건과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환경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생산, 유통, 저장 과정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잠재적 위험 식별 및 모니터링과 재사용 물의 안정성을 보장해야하는 위험 관리시스템으로 보완될 것임.
- 또한 새로운 투명성 규정은 일반 대중에게 재생수(reclaimed water)의 품질 및 양, 보장 허가, 적합성 검정 결과 등을 포함하여 EU 회원국 물 재사용 프로젝트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5월, EU집행위원회는 농업에서 잡용수(non-potable water)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재생수(reclaimed water)로 생산된 식품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안을 발의함.

❍ 신임 EU환경부문집행위원장(Virginijus Sinkeviius)은 관련 합의를 환영한다며, “이번 잠정 합의로 EU는 기후 변화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확보했으며, 물 절약 및 효율성 대책과 함께 농업부문의 재생수(reclaimed water) 사용은 수압과 가뭄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시민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함.

❍ 비공식적인 합의는 이제 유럽 의회와 유럽위원회 양쪽의 공식 승인이 되어야 법률이 될 수 있음.

- 법으로 제정된다면 해당 규정은 EU 공식 저널에 게재되고 20일 후에 발표됨.

❑ 관개 농작물

❍ 이미 도시폐수처리지침(Urban Wastewater Treatment Directive)의 규정에 따라

특정 처리를 거치고 있는 도시 폐수는 새 법안 아래에서 새로운 최소 품질 요건을 충족하고, 농업에 적합한 사용을 위한 추가 처리과정을 거치게 될 것임.

- 이러한 최소 표준 요건에는 미생물 수치 한계(예를 들어, 대장균 박테리아 수준)와 물리 화학적 매개 변수(physico-chemical parameters)가 포함됨.
- 재생수(reclaimed water)는 식량 작물 및 가공된 식량 및 비식량 작물을 관개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음.

❍ 또한 위원회는 규정이 발표된 후 8년 이내에 재생수(reclaimed water)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함.

- EU회원국들은 인간의 건강과 동물 및 환경이 철저히 보호되는 조건에서 산업, 편의시설, 환경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임.

❑ 기후변화 적응

❍ 규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EU전역의 물 부족을 완화하고, 특히나 폭염과 심한 가뭄동안 밭의 관개를 위해 충분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들이 기후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함임.

- EU 국토의 3분의 1은 이미 1년 내내 물 스트레스로 고통 받고 있으며, 이 문제는 기후 변화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갈수록 예측이 어려운 기후 변화는 향후 수십 년 동안 농업에 필요한 담수(freshwater)의 양과 질 모두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규제 격차 해소

❍ 발의된 입법안은 오늘날의 EU의 물 재사용이 담수 이전(freshwater) transfer)과 담수화(desalination)와 같은 대체 물 공급 방법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재성에 훨씬 못 미친다는 EU집행위원회의 견해에서 비롯되었음.

- EU집행위원회는 단지 6개 회원국만이 법규나 비규제 표준 부분에서 물 재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요건들의 엄격함의 수준은 상당히 다름을 확인함.

- 따라서 새로운 규정은 도수 폐수 재사용을 위한 EU 전역의 조건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제 격차를 줄임으로써 물과 식품에 대한 EU의 기존 법률 체계를 완성해야할 것임.

❍ 현재 EU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을 통해 물 재사용을 허용, 권장하고 있음.

- 도시폐수처리지침(Urban Wastewater Treatment Directive)은 처리된 폐수는 필요한 경우 재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EU 물관리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은 강 유역 각각에 대한 대책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한 방안으로서 물 재사용을 열거하고 있음.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22383/EU-lawmakers-strike-deal-on-water-reuse-for-agriculture (2019.12.04.)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에 대한 평가와 권고 사항*



❍ 유럽연합 의회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2018년 6월 제출한 공동농업정책(Post 2020 CAP) 개혁안(직접지불제, 농촌개발)을 평가하고, 권고 사항을 제시하였음.

❍ **[직접지불제]** 유럽연합의 소득지원방식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새로운 개혁안에서도 현재와 동일한 (면적 기준의) 지급방식을 따르고 있음.

❍ 현재보다 조건성(conditionality) 기준을 높임으로써 기후·환경·생물 다양성·보건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였고,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수립한 환경계획(eco-scheme)에 농업인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다만, 개혁안에서 직불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상한선 적용에 노동비용 공제) 대농이 직불금을 과도하게 수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농가당 직불금 수령액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였음. 그러나 상한선 적용 시

* European Parliament가 발표한 "Assessing the future structure of direct payments and the rural development interventions in the light of the EU agriculture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2018.10.)"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유급 근로자의 급여와 암묵적 노동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인해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임.

- **(공정성 훼손)** 회원국별로 농업인 의무 수준이 다를 수 있고, 환경계획에 참여한 농업인에 (노력에 비해)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소득연계지원 (생산과 연계된 소득지원) 과정에서 시장 왜곡이 발생 수 있음.
- 소득연계지원은 특정 품목 생산과 소득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장 왜곡이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소득연계지원 시에 지원 대상을 엄격히 구분하고, 지원받는 농업인 비율을 제한할 필요 있음.
- **(가이드라인 미비)** 기후변화 대응을 우선순위 목표로 설정하였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했음.

❍ **[농촌개발]** 농촌개발정책 관련 주요 변화는 새로운 전달체계를 수립하였다는 점에 있음. 즉, 현재는 의무준수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나, 개혁안에서는 성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전과 같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세세한 자격조건들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음. 이를 제외하고 핵심적 원칙이나 범위에서 큰 변화는 없었음. 개혁안에서 농촌개발(제2축) 관련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공정성)** 지역별로 이질적 생산환경과 규제조건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정성을 위해 불리한 조건에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농업 투자 지원)** 농업 투자는 농업 지속가능성 제고에 필수적임. 따라서 CAP 예산의 일정 수준 이상이 농업 투자 지원에 투입되도록 의무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지원방식은 시장의 질서를 해치지 않고 WTO 규정에 합치되어야 함.
- **(위험관리)** 현재 유럽연합의 민간 보험은 농업인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음. 민간 보험과 공공 보험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특정한 경우(예: 질병 발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홍보를 통해 위험관리수단에 대한 농업인 인식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함. 예를 들어, 다년생작물보험(Multi-Peril Crop Insurance)의 경우 다수의 회원국에서 가입이 가능하나 현재까지 보조금 지원 없이는 높은 가입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협력)** 혁신과 농가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 개혁안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협력

촉진을 위해 생산자단체(PO) 조직, 품질계획(quality scheme) 수립, 유럽혁신파트너십(EIP), LEADER 프로그램,[3] 산림관리계획,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빌리지, 로컬푸드를 활성화시켜야 함. 다만 이 과정에서 투자 중복을 방지하여야 하며,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절감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정보공유)** 농가에 대한 자문서비스(farm advisory service)를 지원하고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 개혁안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전략적 계획에서 자문서비스가 농업지식혁신체제(AKIS)에 통합될 수 있는 방안과 예산을 제시해야 함. 또한 유럽연합혁신파트너십(EIP)을 통해 회원국 간에 농업 분야 연구 결과와 지식을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지식을 창출하는 단위인 운영그룹(OG)은 프로젝트 결과를 의무적으로 EIP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4.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 회원국별 생산자지원 수준 추정 결과*



❍ 2018년 EU의 농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37%를 차지하였고, 2021-2027년에는 28~31%로 하락할 전망이나, 예산규모는 연간 500억 유로가 넘는 금액을 지출할 예정임.

❍ EU의 농업지원으로 농산물 생산량 증가와 그에 따른 가격 하락, 수입국 여건 악화와 같은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농업이 전체 GDP의 15%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자국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 국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측면으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됨.

❍ OECD에 따르면 2018년 EU 평균 %PSE[4]는 20%로 OECD 평균을 상회하였음. 다만

3) 공공-민간-시민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것으로, 농촌의 지방자치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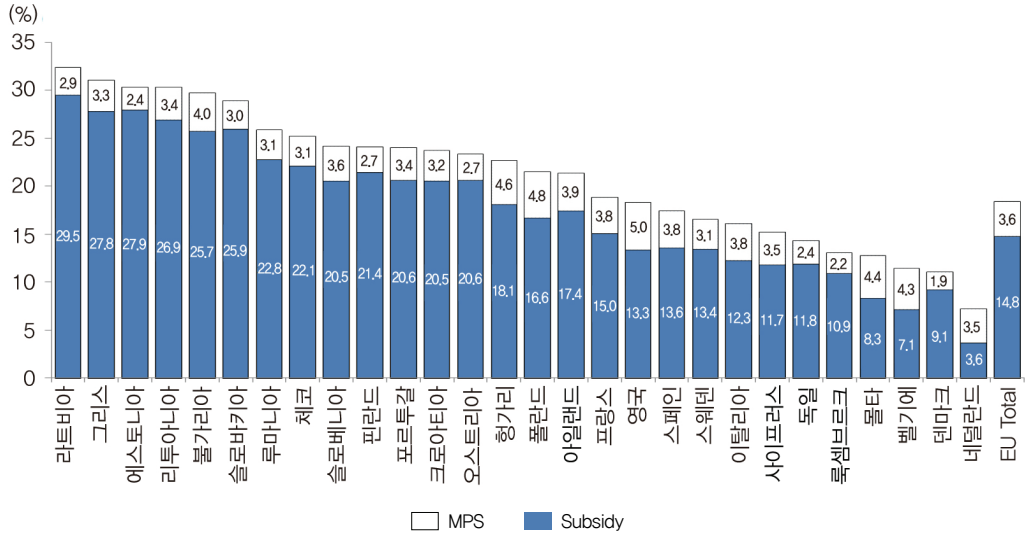
*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가 발표한 "New Estimates of Agricultural Support And Un-Common Agricultural Policy(2019.11.)"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4) PSE(Producer Support Estimate)는 농업지지 정책에 의해 연간 농업인에게로 이전된 금액을 의미하며, 재정지불액과

EU의 보조금은 대부분 생산과 비연계되어 있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 2017년 EU 회원국별 %PSE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회원국별로 생산자지원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상위 6개국(라트비아, 그리스,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은 %PSE가 최저치를 기록한 네덜란드(7.1%)에 비해 4배 이상 높았음.
- 공동농업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영국의 지원 수준(18.3%)은 유럽연합 평균(18.4%)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프랑스(18.8%)는 평균보다 약간 높았으며, 독일(14.3%)은 훨씬 낮았음.
- 벨기에(4.3%), 헝가리(4.6%), 몰타(4.4%), 폴란드(4.8%), 영국(5.0%)은 높은 시장가격지지(MPS)[5] 수준을 보였음.
- 시장가격지지(MPS)는 국내외 가격차를 정책에 의한 지지로 간주해 생산자에게 지원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추정치로서, 국내외 가격차에 연간 국내 생산량을 곱해 산출됨.



❍ 회원국 간 지원 수준 편차는 정책 목적과 무관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농가지원은 면적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면적당 지원액은 과거 생산액,

시장가격지지(MPS)로 구성됨. %PSE는 PSE를 각국의 생산자총수취액(=농업총생산액+재정지불액)에 대한 비율로 변환한 수치임.

영농방식, 청년농업인 수, 생산량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4.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연합 농업부문 고용 실태와 전망*



❍ 유럽연합 농업 취업자 수는 2003년 1,310만 명에서 2018년 910만 명(Annual Working Unit, AWU)[5]으로 지난 15년간 약 30% 감소하였음. 동시에 중소농의 감소와 대농의 증가로 전체적인 농가 수가 줄어들면서 농지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체코나 슬로바키아와 같이 농가 수가 증가한 회원국도 있었음.

❍ 가족농 형태가 농업 노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상업농 비중이 높은 지역도 있었음. 또한, 농업 노동인구의 83%가 파트타임 혹은 부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였음.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역내 인력 1.6%, 역외 인력 2.7%로 아직 낮은 수준이었음.

❍ 유럽 농업 노동시장은 최근 기술진보, 청년층과 고학력 인구의 농업 종사 기피, 고령화 등으로 구조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유럽연합 농업인들은 기계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낮은 기술 수용력, 노동 수요의 계절 진폭, 타산업에 비해 낮은 임금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음. 토지 대장 누락으로 토지 거래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도 있음.

❍ 향후 유럽연합의 농업부문 노동시장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음.

- 기계화의 진전으로 상업농이 증가하고 중소농의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보임. 한편, 상업농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신기술 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

- 모든 농가에 집약적 생산방식이 요구될 수 있음. 중소농은 농촌관광 등 농가수입 다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

* European Parliament가 발표한 "The EU farming employment: current challenges and future prospects (2019.10.)"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5) 농업취업자 수는 전체 농업노동력을 정규 연간노동단위(Annual Working Unit, AWU)로 변환한 값임.

- 농업과 비농업 사이의 격차가 심화될 것이며, 농지가격 상승으로 신규 진입 인력 감소가 계속될 것임.
- 제한적 일자리, 사회적 인프라 부족, 삶의 질 악화로 농촌을 떠나는 인구도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인구유출은 도시 주변 농촌에서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됨.
- 근로자 고용 시 임금 규제를 충족시키면서 농가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가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계절 근로자와 이주 노동자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하면서, 중소농가들이 성수기에도 안정적으로 추가 인력을 접근·등록·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공동농업정책은 농업·농촌 일자리에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음. 공동농업정책 내 존재하는 다양한 사업들은 투자 성격과 규모, 경영주 선택, 영농체계에 따라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음.
- 예를 들어, 경영주의 선택으로 경영주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가지고 자본 투자를 할지, 추가 인력을 고용할지에 따라 인력 수요가 달라질 수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4.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연합 중장기 농업 전망(2019-2030)*



❍ 소비자들은 과거와 달리 농식품 구매 시 편리성과 가격뿐만 아니라 보건, 동물복지, 기후변화, 환경을 고려하고 있음. 향후에는 농식품에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기대가 시장의 형태를 결정할 것임.
- 유럽연합 소비자들에게 식품 구매 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농식품의 가격, 안전성, 윤리성, 신념으로 조사되었음.
- 이러한 소비자들의 변화는 로컬푸드, 유기농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바쁜

* European Commission가 발표한 "EU agricultural outlook 2019-30: societal demands driving food market developments, combining affordability, sustainability and convenience (2019.12.10.)"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생활습관으로 인한 간편식 수요도 동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 세계 1인당 식품소비량과 자급률은 증가 추세에 있음.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회 창출과 함께 경쟁 역시 심화될 것임.

- 예를 들어 세계 곡물 수요 증가로 유럽연합 밀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며, 동시에 흑해 지역에서 생산된 밀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것임.

❍ 향후 유럽연합 농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 1억 7,830만ha로 추정되는 반면, 두류 작물, 사료, 유지 작물 경지면적은 각각 46%, 2%,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유럽연합의 두류 작물은 완두(field pea), 잠두(field beans), 가는잎미선콩(sweet lupins)으로 구성됨.

❍ 식물성 단백질 소비가 증가하면서 기존 육류와 유제품 가격 하락이 나타나 세계시장에서 육류와 유제품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유럽연합 내 두류 작물 생산량 증가로 식용 두류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유럽연합 농업 부문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 전망임.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인해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유럽연합을 포함한 돼지고기 수출국들의 생산량 증가가 나타날 것임. 그러나 유럽연합은 환경 규제로 생산량 증가에 한계가 있음.

❍ 젖소 사육마리 수 감소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이나, 농작물 생산량 증가는 가축 분뇨 사용으로 아산화질소 배출을 증가시킬 것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까지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4.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아시아

인도네시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확정

❍ FAO에 따르면, 지난 12월 12일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북부 수마트라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고 확정함.

❍ 지난 9월 말부터 북부 수마트라지역에서 돼지 사망률이 증가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증세가 비슷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로 인한 폐사로 보았으나, 조사결과 ASF로 인한 폐사로 밝혀짐.
-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약 2만 7,000마리의 돼지가 이미 북부 수마트라에서 ASF로 죽었으며, 매일 수천마리의 돼지가 폐사되고 있다고 함.

❍ FAO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와 ASF 차단을 위해 협력 중이며, 인도네시아 상황에 적합한 대응안을 마련하고 있음.

❍ ASF 확산으로 약 1억 6,000만 달러 규모의 돼지가 폐사될 수 있으며, 이는 소규모 농장주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22492/ASF-finally-confirmed-in-Indonesia (2019.12.16.)

일본, 식량자급률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

❍ 일본 식량자급률이 장기적으로 감소한 원인은 생활 변화에 따라 자급률이 높은 쌀 소비는

* 일본 농림수산성 식량·농업·농촌 정책심의회 「食料自給率及び食料自給力の検証」(2019.11.12.)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감소하고 자급률이 낮은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면서 국내 농산물 생산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임.

❍ 2025년 목표 식량자급률은 48%, 사료자급률은 40%이며, 2018년도 식량자급률은 37%, 사료자급률은 25%임. 쌀, 닭고기, 달걀은 목표 생산량을 초과 달성하였으나 밀, 대두 등은 기후 영향으로 목표 생산량에 미치지 못했음.

❍ 대두, 밀, 사료용 쌀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식용 쌀, 노동집약적인 채소·과일, 서류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음. 또한 경지이용률(총 재배면적÷농지면적)은 감소하는 추세임.

❍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대두, 밀 등은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쌀 감소분을 보전하기에는 부족하며, 다양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음. 농지 또한 감소세를 보이며 최근 주요 농업인의 농지집약률 증가세도 둔화하는 경향을 보임. 농지 규모화·단지화를 가속하여 주요 농업인이 더욱 많은 농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를 추진해야 함.

❍ 밀·대두 재배면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습해(토양수분 과잉으로 인한 피해)나 연작피해 등에 의해 단위 수확량이 부진한 상황임. 지역에 따라 논을 중심으로 한 윤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에 맞는 배수대책이 필요함.

❍ 과일 및 채소는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과 수확량이 안정적인 복합환경제어형 시설 생산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생산자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음. 최근 자연재해로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이상기후로 인해 안정적 공급이 힘든 상황임.

- 채소는 가공·외식용을 중심으로 정시, 정량, 정품질, 정가격으로 공급이 요구됨.
- 기후변화에 대응한 육종개발, 생산안정기술 노동력 감소 재배 기술 확립 및 보급과 광역연계, 스톡 포인트(stock point)[6] 정비 등 일괄된 대응이 필요함.

❍ 축산물은 모든 품목에서 전망치보다 소비량이 많음. 닭고기와 달걀은 이미 2025년 생산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원유, 소고기, 돼지고기는 생산목표에 이르지 못했음.

6) 대도시 지방 중소도시에 합리적인 배송을 위해 설립된 유통 중계기지

- 향후 해외수요를 예상하여 지속적으로 규모 확대 및 수익성 향상을 통해 생산기반 강화 추진하고, 노동력 절감에 필요한 첨단기술 보급·정착, 농업인과 외부 지원 조직 역할분담 및 연계, 국산 사료 이용, 가축 배설물 이용 촉진 등이 필요함.

❍ 재배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력 부족으로 감자, 사탕무 등 중노동 작물 재배를 꺼리는 경향이 나타남.

- 또한 수확기에 노동력이 집중되는 과일·채소는 임시고용 노동 부족으로 생산에 지장을 주고 있음. 생산을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기술의 빠른 보급 등을 통한 노동력 절감이 필요함.

❍ 인구감소로 국내 수요가 축소되어 향후 해외수요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수요의 잉여분을 수출하는 발상에서 벗어나 수출을 지향한 산지·유통가공체제가 필요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03.1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식량자급률 및 식량자급력 향후 검토 방향*



❍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량자급률 및 식량자급력에 대해 검토하여 목표 검증과 논점을 발표함.

- 식량자급력은 농림수산업의 잠재 식량 생산 능력이며, 식량자급력을 지표화한 식량자급력 지표는 국내 생산만으로 식량을 최대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1인 1일 공급칼로리로 계산한 것임.

❍ 식량 소비 동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는 인구감소·고령화, 식품 손실(food loss) 감소, 영양·식생활 개선, 관광객 증가 등이 있음. 또한,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현황, 식사의 외부화[7]·간편화 등이 국내 생산 동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 일본 농림수산성 식량·농업·농촌 정책심의회 「食料自給率及び食料自給力の検証」(2019.11.12.)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7) 가정 내에서 식품을 조리하지 않고 외식 및 간편식 섭취

-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식량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최근 식량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지 않음.

〈표 1〉 식량자급률 목표 검증과 논점

식량자급률 목표 검증	논점
• 국산 쌀 수요 감소, 국산농산물 소비 감소로 칼로리 기반 식량자급률 하락 • 생산액 기반 식량자급률은 경기회복 및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큰 변화가 없음. • 향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수요를 통해 수출이 증가하면 식량자급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일본 생산 상황 및 목표를 기반으로 국내외 수요 변화에 따른 생산목표(품목, 생산방식) 설정
• 향후 식량 소비는 인구감소·고령화를 시작으로 해외 관광객 증가, 식품 손실 감소, 건강지향 선호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소비자 식품소비를 기반으로 향후 식품 소비 동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고려 • 바람직한 식품 소비를 위한 소비자의 적극적인 대응도 검토
• 사료자급률을 반영하여 식량자급률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국내 생산을 엄밀히 파악 가능함. • 한편 실제 생산량으로 계산했을 경우보다 식량자급률이 낮게 산출되기 때문에 소비자 실태와 맞지 않으며, 국산축산물 생산자의 노력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음.	• 식량자급률 설정 시 사료자급률을 반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검토

〈표 2〉 식량자급력 목표 검증과 논점

식량자급력 목표 검증	논점
• 식량자급력 지표는 2015년 기본계획부터 책정되었으며 일본 농림수산업의 잠재 식량 생산력을 나타냄. • 국민의 식량자급력에 대한 이해를 양성하고 식량 안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심화시키기 위해 제시	• 식량자급률과 함께 일본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생산에 관한 정책 검토 및 운용 시행
• 현재 식량자급력 지표는 거의 농지 면적 감소로 좌우되며, 농업인 및 농업 기술 변동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과제	• 농지는 식량자급률을 나타내는 주요 요소이지만 농지의 효율적이고 폭넓은 유지·활용 방법과 함께 농업인 및 농업 기술 요인 분석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 식량자급력 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확산되었지만 국민적 논의 수준까지 심화되지 않음.	• 국내외 식량 사정을 포함하여 식량 안보에 관한 이해가 깊어지도록 국민적 논의 환기 방법 검토

❍ 생산액 기반의 경우 수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일본의 농업생산 실태에 부합하나 생산액이 높은 작물 생산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4.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농업·농촌 소득 증대*

❍ 일본 농업·농촌은 농업종사자 감소 및 고령화, 농업소득 감소로 위기에 처해 있음.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산업을 유지하고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함.

❍ **[농업총생산액]** 농업총생산액은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2015년 이후 쌀, 채소 등의 수요증가로 3년 연속 증가함. 이로 인해 2017년 농업총생산액은 9조 3,000억 엔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농업생산액 증가 원인으로는 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지속, 와규와 샤인머스켓 등의 고부가가치 품목 전환, 수출 확대의 영향으로 보임.
- 2013~2017년 농업총생산액을 품목별로 보면 축산물, 채소, 과일 생산액이 크게 증가하였음.

❍ **[농업생산소득]** 농업생산소득은 농업총생산액 감소 및 투입재 가격 상승으로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2015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증가하였음. 2017년 농업생산소득은 3조 8,000억 엔으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 **[농업소득]** 농업소득은 2조 9,000억 엔(2013년)에서 9,000억 엔 증가한 3조 8,000억 엔(2017년)으로 2025년 목표인 3조 5,000억 엔을 이미 달성하였음. 향후 더욱 농업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농지 규모화·단지화 및 스마트 기술 현장도입 등에 의한 노동력 절감, 고수익 작물 전환, 수출 등을 추진해야 함.

❍ **[농촌소득]** 농촌소득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2조 엔이 되었으나 2025년 목표인 4조 5,000억 엔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함. 향후 식품산업 등 2차·3차 산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사업을 창출해야 하며,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도농 교류 추진이 필요함.

---

* 일본 농림수산성 식량·농업·농촌 정책심의회 「'農業所得の増大と農村地域の関連所得の増大'の検証について」(2019.11.26.)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표〉 농업소득 및 농촌소득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25년
농업소득	2조 9천억 엔 (100)	2조 8천억 엔 (96)	3조 3천억 엔 (118)	3조 8천억 엔 (128)	3조 8천억 엔 (128)	3조 5천억 엔
농촌소득	1조 2천억 엔 (100)	1조 3천억 엔 (108)	1조 5천억 엔 (125)	1조 8천억 엔 (150)	2조 엔 (167)	4조 5천억 엔

주: ( )의 숫자는 2013년도를 기준(100)으로 했을 때 비교치임.

❍ 농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 활동 중 가공·판매 등 7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농촌소득을 산출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중에서 도농 교류 분야가 비교적 많이 증가한 것에 비해 가공·판매 분야는 부진함.

- 가공·판매, 수출, 도농 교류, 의료·복지·식품·농업 연계,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 지역에서 소비), ICT 활용·유통, 바이오매스·재생가능에너지분야를 대상으로 함.
- 농업인이 주체가 되어 가공·판매 등을 하는 6차 산업은 전체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또한 향후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라 지역 내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4.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

일본, 농업진흥정책*



❍ 일본 농림수산성은 새로운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을 위한 정책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9일에는 관련 부처 정책을 포함한 농촌진흥정책을 제시하였음.

-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은 식량·농업·농촌 기본법에 근거하여 일본 정부의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방침이며, 정세변화 등에 따라 5년마다 변경하고 있으며 2020년에 새롭게 발표될 예정임.

* 일본 농림수산성 「各府省施策も含む農村振興施策の体系的整理」(2019.12.9.)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고용기회 확대

❍ **[농업경영 확립]** 농업현장의 의견을 기반으로 다양한 농가에 적합한 기술을 도입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복합경영 추진하고, 도시만의 강점을 살린 도시농업 활성화를 목표로 함.

- **(조건불리지역 기술개발)** 조건불리지역(중산간지역)의 생산 및 수익 향상을 위해 소형 농기계(노동력 절감, 자동화), 브랜드 품종, 고품질 재배기술, 야생동물 피해 방지 기술 등을 개발, 농업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명확한 연구 목표하에 국가 주도 연구개발 시행
- **(복합경영 추진)** 소규모 농가를 포함한 다양한 농가에 적합한 농업경영을 위해 임업과 조합하는 등 지역 특성을 살린 복합경영 지원 방향을 검토
- **(도시농업 활성화)** 국토교통성과 연계하여 도시 농지보전을 위한 법률 및 제도를 조정하고 세제개정을 통해 도시농업 활성화

❍ **[소득과 고용 기회 확대]**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농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수렵육 활용, 농업과 복지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농촌지역 자원 발굴, 6차산업 활성화, 타 분야와 조합[8]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농촌발(發) 이노베이션) 및 현장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촉구
- **(농촌관광 활성화)** 국립공원, 전통 건축물 보전지역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타 부처와 정보 공유 및 정책을 연계하여 농촌관광 추진

❍ **[수렵육 이용 확대]** 현재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수렵육 공급을 촉진하고 있으나 포획·처리가공·공급·소비 각 단계에서 관계자 및 관련 부처 연계가 필요함.

- **(농업·복지 연계)** 2019년에 발표한 '농업·복지 연계 추진 비전'을 기반으로 농업 발전 및 장애인 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공생 사회 실현

❍ **[지역경제순환 확대]** 지역자원(바이오매스, 재생가능에너지), 지역 내에서 생산한 농축산물·가공품 등을 지역 내에서 소비·활용하여 경제 순환을 확대함.

8) 농촌을 주제로 한 만화 등 타 분야와의 연계 활성화

❑ 농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여건 정비

❍ **[지역 커뮤니티 기능 유지·강화]**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 기능을 유지·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타 부처와 연계를 통해 생활서비스와 시설을 모아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변 마을과 교통 네트워크로 연결된 '작은 거점' 형성
-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및 시설의 기능 다양화(마을 조성, 복지, 방범 등)
- 다양한 연령층의 소통을 통한 농지 및 마을 미래상 설정

❍ **[생활 인프라 확보]** 타 부처와 연계하여 농촌에서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정보기반, 교통 등의 생활 인프라 확보를 추진함.

- (정주 여건 강화 위한 종합적인 활동계획 수립) 정주 여건이 부족한 중산간지역·낙도 등에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활동계획서작성 지원

❍ **[야생동물 대책·수렵육 활용]** 전문가 부족, 서식지 확대로 야생동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야생동물 피해대책 실시 및 수렵육 활용방안을 추진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4.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